

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 지역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 김종웅 · 신두섭 · 김신호

■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노홍석



지역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 김종웅 · 신두섭 · 김신호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김종웅¹⁾ · 신두섭²⁾ · 김신호³⁾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다음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총생산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외국인투자실적이 많은 지역이 지역총생산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외국인 투자는 기업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경제적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집적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일 산업의 국내 기업 집적도,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수, 공단 분양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중요하다.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적 지원이 연계된 인센티브지원과 사후 관리의 종합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역산업과 연관된 부품소재기업들의 입지

1) 대구한의대학교 유통경제학부 교수 / E-mail: kimcu@dhu.ac.kr /

☎ (053) 819-1355 /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E-mail: sds@krila.re.kr / ☎ (02)3488-737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3

3)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E-mail: shinho27@dhu.ac.kr /

☎ (053) 819-1377 /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

를 지원해 주며,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단지마련, 분양가 혜택, 임대료 지원 뿐 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 등을 통한 우수 인력 공급, R&D에 의한 원천기술의 공급 등을 지원해 주며, 지역의 R&D인력과 산업인력을 각각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기업유치, 지역선택요인, 지방재정, 재정지원제도

I.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10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발전에 대한 평가는 지역 발전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발전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지난 정부시절에 지역 발전 및 혁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지표에 대한 연구는 김태환외(2004), 장재홍외(2006)등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⁴⁾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가중치 마련 및 적용이 필요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부문별 발전에서 경제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발전을 비교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경제부문의 지표인 지역의 1인당 GRDP이다.

각 자치단체들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총생산 즉 GRDP를 높이기 위해서 GRDP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업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기업유치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술 및 자본설비의 증가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낮아지고 시장 확보 및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국내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확대되고 있

4) 김태환외(2004)의 연구에서는 지역잠재력평가지표를 장재홍외(2006)에서는 지역혁신지수의 설정을 통해서 지역별 잠재력 및 혁신역량을 평가하였다.

다. 즉 대기업의 해외투자확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노동수요 감소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지역개발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기업유치에 의한 투자 방식은 투자효과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정부에 세수입을 가져다주며, 지역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전수시켜 주는 등 부수적인 효과는 실로 지대하기 때문이다.⁵⁾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행동 즉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방향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 및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투자유인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개선 및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약속했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효과가 미미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투자지역 선택에 대한 연구는 Caves(1996), Belderbos and Carree(2002) 등에 의해서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최창규(2005)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왔으나 기업의 입지선택과 관련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이기동외(2008)의 연구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비용에 영향을 주는 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준비금제도 등의 투자유인정책수단들의 자본비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1970년대 이후로 King and Fullerton(1984), Jorgenson and Landau(1995)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유효세율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의 자본소득세 정책수단들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박태원(1985)의 연구를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어서 윤건영(1988), 원운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1998)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5) KOTRA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매출액은 186조원으로 국내 전체 매출액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창출한 고용인원도 38만7,000명으로 국내 전체 기업 고용인원의 3.9%로 나타나고 있다.(서울경제 2007년 5월 13일)

그러나 기업의 자본비용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중앙정부의 투자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관련 재정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는 최영출(1994, 1995), 오연천(1988), 김승민(2004) 등이 있다. 특히 김승민(2004:15)에서는 사후관리제도의 강화와 투자인센티브 경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럽에서는 조세감면형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보다는 현금보조금(cash grant)과 같은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점으로 강조하고 있다.(김승민, 2004; UNCTAD, 2002).⁶⁾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유치가 기업의 지역선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을 재정정책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기업투자유치와 지역발전

지역 발전은 지역 총생산을 좌우하는 기업의 양적, 질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게 되는 지역별 기업유치실적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면 2000년 이후의 외국인 투자기업 수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77.3%가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지역에 8.1%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⁷⁾ 같은 기간 동안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전무하므로 지역별 투자기업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서울집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6) UNCTAD(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s, New York, 2003.

7)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분류임

연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이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7년부터 인천,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투자유치여건이 기존 대기업의 존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으로 비교우위가 있거나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⁸⁾

즉 최근의 연도별, 지역별 외국인 투자실적 및 지역별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울산과 같은 기업 집적지를 확대하거나, 인천, 전남의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지역과 같이 기업 활동 조건이 개선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1〉 지역별 · 연도별 외국인 투자기업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서울	705	1167	898	1101	1464	1917	1474	729	11	9465
인천	0	0	0	0	0	0	0	897	95	992
대전	93	0	1	1	0	0	0	0	0	95
대구	104	6	3	2	2	2	0	0	0	119
부산	511	12	7	3	1	0	0	0	0	534
광주	9	0	1	0	1	0	0	0	0	11
울산	0	0	0	0	0	0	0	60	2	62
경기	23	11	10	8	3	4	6	1	1	67
강원	0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236	236
충북	0	0	0	0	0	0	0	0	163	163
전남	0	0	0	0	0	0	0	26	126	152
전북	0	0	0	0	0	0	0	0	89	89
경남	18	2	4	0	1	0	0	0	2	27
경북	11	2	0	0	0	0	1	0	0	14
제주	0	0	0	0	0	0	0	0	42	42
미정	49	1	0	2	0	0	0	0	2	54
합계	1523	1201	924	1116	1472	1923	1481	1713	769	12122

자료: 지식경제부(2008)

8) 울산지역은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며 인천의 송도지역은 2003년, 전남의 광양만지역과 부산, 진해지역은 2004년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2005년부터 충북지역과 인접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제주도는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래 <표-2>에서 지역별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이를 보면 전체산업 중에서 도, 소매업이 58.1%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9.9%, 전기전자가 5.4%, 음식, 숙박업이 3.9%, 금융보험업이 3.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은 지역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경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2> 지역별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수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강원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미정	합계
광업	0	0	0	0	0	0	1	5	0	1	0	0	0	0	0	0	0	7
농,축,임업	0	0	0	0	0	0	0	22	0	3	0	0	0	0	0	0	0	25
어업	0	0	0	0	0	0	0	2	0	1	0	0	0	0	0	1	0	4
비금속광물	1	1	1	0	1	1	1	38	0	6	0	0	0	0	1	0	0	51
제지,목재	0	1	0	0	0	0	1	21	0	3	1	0	0	2	2	0	0	31
기계,장비	7	0	0	0	0	3	15	249	0	22	6	0	2	0	7	1	1	313
기타제조	0	1	0	0	5	1	2	100	0	9	1	0	1	0	1	2	0	123
금속	0	1	0	0	3	1	4	112	2	8	1	0	2	0	4	1	0	139
섬유,직물,의류	0	2	1	0	3	0	4	66	0	7	0	0	0	1	1	0	2	87
식품	1	0	0	1	2	0	6	66	0	2	1	0	1	0	0	1	0	81
운송용기계	2	2	0	3	3	1	7	210	0	27	1	0	3	0	4	0	1	264
의약	0	0	0	0	0	0	3	29	0	4	0	0	0	0	0	0	0	36
화학	11	2	0	0	4	2	10	170	1	16	1	0	0	1	4	2	1	225
전기,가스	1	0	0	0	0	0	0	22	0	3	0	0	0	0	1	1	0	28
전기,전자	7	5	0	0	16	5	20	520	5	37	6	0	1	1	10	9	7	649
운수,창고	2	1	0	0	2	0	5	222	3	27	4	0	1	2	3	6	1	279
음식,숙박	1	0	1	0	0	6	14	361	0	47	6	0	2	6	15	7	1	467
전문직별건설	0	0	0	0	0	2	2	31	2	6	2	0	0	0	0	1	0	46
종합건설	0	0	0	0	2	0	1	49	0	2	0	0	0	0	2	0	0	56
통신	0	0	0	3	0	1	3	34	0	0	0	0	0	0	1	0	1	43
공공, 기타산업	0	1	0	1	2	1	9	149	0	12	4	0	3	1	4	0	1	188
금융보험	1	1	0	0	8	4	14	321	0	31	3	0	2	2	4	3	2	396
비즈니스서비스	7	1	3	1	15	13	72	927	8	83	14	0	11	3	21	12	8	1199
문화오락	1	1	1	0	0	0	4	93	0	12	0	0	1	0	0	1	0	114
부동산,임대	0	0	1	0	2	0	8	166	1	33	8	0	1	4	2	2	0	228
도,소매	25	7	6	2	51	54	328	5480	40	590	93	0	58	19	149	113	28	7043
합계	67	27	14	11	119	95	534	9465	62	992	152	0	89	42	236	163	64	12122

자료: 지식경제부(2008)

아래 <표-3>에서 산업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규모의 추이를 보면 전체산업 중에서 투자 건수로는 도, 소매업이 49.6%로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10.5%, 전기전자가 7.1%, 금융보험이 4.8%, 음식, 숙박업이 3.2%로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비중과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별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금융보험업이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12.5%, 도, 소매업 10.3%, 문화오락 7.2%, 화공 5.6%, 부동산 임대 5.6%, 비즈니스서비스 5.5%, 운송용 기계 4.8%, 음식, 숙박 4.2%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⁹⁾ 외국인 투자의 산업별 투자금액에 의한 순위는 투자기업수 및 투자 건수에 따른 순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유치산업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3> 산업별 · 연도별 외국인 투자규모

(단위: 백만불)

산업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연도별합계	15,256	11,287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14	2,716	26,742	90,936
농,축,수,광업	0.000	0.001	0.001	0.001	0	0	0	0	0	0.003	0.000
제조업	0.450	0.257	0.256	0.258	0.486	0.266	0.377	0.256	0.266	0.211	0.338
식품	0.005	0.055	0.005	0.006	0.009	0.028	0.005	0.001	0.007	0.008	0.014
섬유,직물,의류	0.006	0.017	0.006	0.002	0.001	0.002	0.019	0.001	0.002	0.008	0.007
제지,목재	0.005	0.006	0.005	0.005	0.001	0.007	0.001	0.001	0	0.003	0.004
화공	0.051	0.045	0.015	0.104	0.107	0.024	0.067	0.048	0.027	0.024	0.056
의약	0.006	0.001	0.005	0.002	0.013	0.001	0.004	0.003	0	0.004	0.004
비금속광물	0.025	0.021	0.007	0.006	0.009	0.032	0.014	0.004	0.007	0.006	0.015
금속	0.019	0.004	0.055	0.022	0.008	0.002	0.021	0.022	0.011	0.013	0.018
기계,장비	0.104	0.007	0.024	0.036	0.027	0.011	0.032	0.029	0.025	0.030	0.036
전기,전자	0.168	0.079	0.056	0.045	0.230	0.09	0.160	0.088	0.141	0.071	0.125

9) 2000년 이후로 1억불 이상의 규모가 큰 금액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도 전체건수 165건 중에서 금융보험이 39건, 전기, 전자 18건, 도,소매 14건, 문화,오락 13건, 부동산임대 11건, 종합건설, 화공, 음식숙박이 각각 9건으로 산업별 투자금액의 순위와 유사하다.

운송용기계	0.055	0.012	0.064	0.018	0.070	0.061	0.044	0.053	0.028	0.026	0.048
기타제조	0.003	0.006	0.010	0.007	0.007	0.006	0.005	0.001	0.013	0.014	0.006
서비스업	0.532	0.640	0.563	0.628	0.480	0.717	0.589	0.723	0.711	0.769	0.607
도,소매	0.132	0.132	0.064	0.143	0.088	0.069	0.044	0.173	0.025	0.496	0.103
음식,숙박	0.030	0.038	0.089	0.032	0.004	0.026	0.099	0.040	0.008	0.032	0.042
운수,창고	0.018	0.001	0.045	0.017	0.029	0.031	0.050	0.053	0.019	0.023	0.030
통신	0.012	0.013	0.007	0.076	0.003	0.055	0.004	0.003	0.000	0.006	0.018
금융,보험	0.126	0.156	0.112	0.251	0.251	0.338	0.268	0.218	0.503	0.048	0.222
부동산,임대	0.062	0.049	0.062	0.051	0.020	0.082	0.028	0.092	0.074	0.024	0.056
비즈니스서비스	0.051	0.025	0.03	0.042	0.037	0.083	0.063	0.105	0.048	0.105	0.055
문화,오락	0.081	0.221	0.148	0.003	0.036	0.026	0.027	0.034	0.026	0.015	0.072
공공,기타서비스	0.017	0.001	0.002	0.009	0.008	0.003	0.002	0.001	0.005	0.016	0.006
전기,가스,수도,건설	0.016	0.100	0.177	0.096	0.033	0.015	0.032	0.019	0.021	0.015	0.053
전기,가스	0.013	0.039	0.120	0.013	0.031	0.007	0.001	0.013	0.003	0.003	0.027
수도	0	0.005	0	0	0	0	0	0	0	0.000	0.001
종합건설	0.003	0.055	0.056	0.082	0.002	0.007	0.026	0.005	0.017	0.008	0.024
전문직별건설	0	0	0	0	0	0	0.004	0	0	0.003	0.001

자료: 지식경제부(2008)

아래 <표-4>에서는 지역별 1인당 GRDP 및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가율이 평균 이상의 지역들인 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강원 중에서 경북, 부산, 강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 높은 지역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GRDP 및 증가율이 전국평균이상인 지역 중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서울, 충남, 전남이 모두 최근 3년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총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많은 지역의 GRDP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시·도별 지역총생산 및 투자기업수

구분	1인당 지역별 총생산 (백만원)		증가율	최근3년간
	1995	2004	2004/1995	외국인투자기업수
서울	9.64	17.70	1.84	2214
인천	8.92	14.13	1.58	992
경기	9.29	14.76	1.57	8
대전	7.54	12.83	1.70	0
충북	9.73	16.20	1.73	163
충남	9.34	21.67	2.32	236
광주	7.37	11.95	1.62	0
전북	7.02	12.61	1.80	89
전남	9.56	19.03	1.99	152
대구	6.35	10.00	1.57	0
경북	9.34	20.82	2.23	14
부산	6.71	12.40	1.85	0
울산	-	35.48		62
경남	11.32	16.53	1.46	2
강원	7.87	14.15	1.80	0
제주	8.08	12.65	1.57	42
전국 평균	8.92	16.06	1.80	248.37

자료: 김일태·김봉진(2008)에서 재작성

Ⅲ. 기업투자의 지역선택요인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유치가 늘어날수록 지역 총생산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투자증대 및 신규기업투자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총생산의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해야하는 기존기업의 생산 증대보다는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규기업의 유치가 효과적이다.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여 신규기업의 투자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역선택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인적관계에 의존한 무리한 접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집적경제와 기업의 입지선택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론적, 실증적인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이 입지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은 선택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¹⁰⁾ 관련 연구들 중에서 Caves(1996)는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외국기업의 탐색비용이 국내기업보다는 높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Belderbos and Carree(2002)의 연구에서는 중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 시에 일본기업의 집적장소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신규 또는 추가투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대상지역별 외부효과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측정하게 된다.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 즉 관련 기업의 정도, 노동자의 수준, 임금수준, 기업지원서비스 정도 등에 따라서 입지선택에 따른 외부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지선택에 따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기업입지를 선택하게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지역선택에 대하여 연구한 이기동 외(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일 산업의 국내외 기업의 집적도,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수, 공단 분양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있다. 이외에 외국인 국내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창규(2005)의 연구¹¹⁾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양국 간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양국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임금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상대국의 대출이자율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입지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리해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국내기업의 집적,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수, 외국인 전용단지 등이 있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와 고등교육 이수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효과가 크

10) Marshall(1920)에 의하면 동일 산업의 기업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는 노동력확보, 부품 및 서비스 확보,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발생한다.

11) 이외에도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유승훈(1997), 하종욱, 최귀련(2003) 등에 의해서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자료를 달리하는 연구들이 있다.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²⁾

여기서 국내기업의 집적, 기업의 다양성, 외국인 전용단지 등의 요인들은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등 클러스터형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¹³⁾ 또한 고등교육이수 근로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존재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방연계기업의 집적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시장의 존재보다 부품기업의 존재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공단분양가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경쟁국에 비해서 낮은 임금수준이 효과적이지만 국내 지역 간 입지선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인세인하, 임금수준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지역 간 입지선택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단비용, 교육수준, 전용단지 조성, 부품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IV.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재정의 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비용에 영향을 주는 투자유인정책수단들의 자본비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로 King and Fullerton(1984),

12) Nested Logit분석을 사용한 이기동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와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의 계수값이 각각 4.654와 2.369로 다른 계수k 값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13) 안경산업의 클러스터를 연구한 김중웅외(2005,2007)의 연구에서는 관련기업의 집적, 부품기업과의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Jorgenson and Landau(1995)¹⁴⁾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기간 동안 정부가 시행한 자본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 및 개인의 저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유효세율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의 자본소득세 정책 수단들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곽태원(1985)의 연구에 이어서 윤건영(1988) 등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에는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에 의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서 자본소득세정책이 재원조달 등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원윤희(1996)의 연구와 1980년대 이후의 법인투자의 유효한계세율을 분석한 윤건영·김종웅(1997)의 연구, 자본비용의 변화와 투자의 변화를 분석한 윤건영·김종웅(1998)의 연구 등 분석방법과 분석대상을 달리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지분비용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중앙정부의 투자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 관계로 지방세감면, 공단분양가 인하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관련 재정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는 최영출(1994, 1995), 오연천(1988), 김승민(2004) 등이 있다. 특히 김승민(2004; UNCTAD, 2002)¹⁵⁾에서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조사한 UNCTAD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현금보조금 등을 직접 제공하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에 즉각적으로 부담을 주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보다 조세 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승민, 2004; UNCTAD, 2002)¹⁶⁾. 이러한 연구동향은 국내에서 대부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및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진영환 외, 1989; 최영출, 1994;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988).

14) 이 연구에서는 10여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별, 자산별 자본비용을 분석하였다.

15) UNCTAD(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s, New York, 2003.

16) UNCTAD(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s, New York, 2003.

1. 지방재정 지원의 현황

1) 국내의 지방재정 지원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면 취업기회의 확대와 고용 증가를 통해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킨다. 이는 나아가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러한 세입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투자는 지역생산 및 생활환경 수준을 계속 향상시키고 더 많은 기업과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을 높이게 한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상호 상승작용은 순환 및 확대 재생산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다(최외출,1995:92; 진영환외,1985:89).

한 사례로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은 것에서도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관계 및 영향과 파급효과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6-2003년 기간 동안의 지방세 감면액이 납부액과 거의 같아 지방세 감면혜택 기간 종료와 함께 지방세 수입이 상당 폭 증가할 것이므로 재정측면의 기여도 높아짐을 기존의 연구에서도 실증하고 있다(조계근·황규선, 2003).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검토 대상 중 하나는, 지역경제성장의 과실 중 상당부분이 중앙재정으로 흡수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지방재정 건실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기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최외출,1995:92;오연천 1988:400).

〈표-5〉 각 사업별 재정적 지원 현황

지원사례	재정적 지원	비고
국가산업단지	- 세제, 부담금 감면 - 자금조달 - 기반시설 등 국고지원 - 산업시설용지 및 일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	
외국인투자지역	- 임대료감면(전액, 또는 70%) - 조세감면(국세, 지방세)	

자유무역지역	- 세제지원(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 저렴한 임대료	
경제자유구역	- 세제 · 부담금 감면 - 자금조달지원 - 기반시설 등 국고지원	
기업도시	- 세제 · 부담금 감면 - 자금조달 - 기반시설 등 국고지원	

자료: 금성근 (2006)에서 필자 재구성

그리고,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사업별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세제, 부담금 감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의 사업들도 대부분 조세감면이나 저리의 자금 조달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보면 크게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조세감면(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입주 기업지원, 현금지원제도, 국·공유재산임대료 감면, 분양가 인하, 각종보조금 지원제도 등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와 중소기업의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두 형태 모두에 있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14조, 국가재정지원기준, 도조례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분양가 차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현금지원제도(Cash Grant)제도는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공장 등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용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은 FDI 금액의 5~15% 정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조례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부산, 경남, 경기 지역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6〉 3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현황

구분	부산	경남	경기
분양가 차액보조금	○매입가격의 30% 이내	○정상분양가의 50% 이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10년 이상 영위	○정상분양가의 50% 이내
임대가 차액보조금	○2년내 임대료 50% (매입계약후 5년 이내 처분 금지 등 가능)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	-	-
고용보조금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수 20인 초과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이내, 1기업당 2억원 이내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수 20인 초과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이내, 1기업당 2억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인원 3년 이상 고용유지)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10명 초과 내국인 상시고용 시 1인당 50만원 이내, 1기업당 10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시의 전략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 1인당 50만원 이내, 1기업당 2억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시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1기업당 2억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인원 3년 이상 고용유지)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10명 초과 내국인 상시 고용 교육훈련시 1인당 50만원 이내, 1기업당 10억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시설보조금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이내, 기업당 2억원 이내	○최초 외국인투자 신고 부터 5년 이내, 시설 신설 및 증설시 소요비용의 50/100 이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운영자의 시설신설 또는 확장 사업비의 50% 이내 (10년 이내 처분 금지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60h 2 해당 시설 건립시, 총비용의 50% 이내 ○도지사가 인정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사업비의 20% 이내, 2억원 이내	

자료: 금성근 (2006)에서 필자 재구성

우리나라의 사업별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세는 3년간 면제를 하며, 지방세 중에서 취득·등록세는 면제를 해 주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우 4년 동안 50%의 국세 감면조치와 지방세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재산세도 50% 감면 조치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외국인이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국세는 5년 동안 면제 2년은 50% 감면해 주고 있으면 이 역시 취득·등록세는 면제 조치하고 있다.

〈표-7〉 각 사업별 조세 지원 현황

사업별 분류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외투기업)	3년 면제, 2년 50%	면제	3년면제 2년 50%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시행장(외투기업)	3년 면제, 2년 50%	면제	5년면제 2년 50%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3년 면제, 2년 50%	면제	5년 50%
	투자진흥지구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3년 면제, 2년 50%	면제	3년면제 2년 50%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	4년 50%	면제	50% 감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	-	면제	-
민간투자사업	외국인이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5년 면제, 2년 50%	면제	-

자료: 금성근 (2006)에서 필자 재구성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고도기술사업(467개) 및 산업 지원서비스(111개)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그리고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자유지역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감면액의 계산은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되며 고도 기술수반 사업(첨단업종) 등은 외국인 투자가의 요청이나 관계부처의 요구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의 감면 방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기간은 감면 대상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

간 50%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기간은 8년(5년 이내 100%, 이후 3년간 50%)이다. 다만,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조세감면 결정 이후 취득 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면제되면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감면(공제)기간을 1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비율이 동일하다(오수균, 2003).

〈표-8〉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내용

종전	현행
○ 고도기술수반사업 (265개) ○ 국세 : 법인세 소득세(배당소득세) -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 고도기술수반사업 (435개) ○ 산업지원서비스업 (79개) ○ 외국인투자지역임주사업 ○ 국세 : 법인세 소득세(배당소득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 9-15년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연장 가능

지방세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9-15년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협상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소영일 · 고종문, 2001).

2) 국외의 재정지원

가. 유럽

영국 지방정부의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기타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는 직업창출보조금(Job creation grants), 비즈니스 계획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실무적 지원, 지방세의 감면, 건물, 공장부지 등의 일정기간 무상임대, 공장건설 등의 단계에서의 지원 등 다양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지원패키지는 중앙정부의 것과는 달리 대외적으로는 기밀

에 속한다(NIAO, 1998). 영국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하에 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로 지정하면 기업이 이 지역에 공장, 사무실 등을 세울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를 지정일로부터 10년간 100%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항만, 공항 내 또는 인접지역에 자유지대(Free port)를 설치하여 동 지대에서 저장되거나 처리되어 EU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최승업·김주원·박상규, 1999:48). 영국의 지역사업보조금은 투자보조금(Investment Grants)과 기술혁신보조금(Innovation Grants)의 형태로 주어진다. 투자보조금은 개발지역이나 탄광폐쇄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투자되는 소규모기업에 지원된다. 이 보조금은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적용되며 고정유형자산의 15%정도이며 최대 15,000파운드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기업체는 단지 한 번의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보조금은 새로운 생산제품이나 공정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R&D 사업을 위한 기업에 적용된다. 이를 받으려면 투자사업이 개발지역이나 중간지역, 또는 탄광폐쇄로 타격을 받은 지역, 그리고 일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보조금 규모는 총 투자프로젝트의 50%정도까지이며 최대 25,0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1934년 영국 정부는 웨일즈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지역선택보조금, 지역사업보조금, 직업창출보조금), 융자(유럽투자은행대부금, 유럽석탄 및 철강대출), 법인세감면, 직업훈련지원, 기타지원(비즈니스 계획수립비용, 부지탐사비용 등)의 제도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금성근, 2006: 62).

북잉글랜드 지역개발청의 경우 1998년 7월에서 9월까지의 동향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에 의해 발굴된 것 보다 지역개발기관인 북잉글랜드 지역개발청에 의해 발굴되어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전역에 광역 지역별로 설치되어있는 11개의 지역개발청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해외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서 투자가를 발굴하는 경우와 이곳에서 텔레마케팅 등 자체 기관차원의 노력을 통해 발굴하는 경우가 있다.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중앙이나 지역 투자유치 기관에서 잠재적 투자가를 발굴했다하더라도 이 기업이 영국의 어느 지역으로 투자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기업의 업무성격, 각 후보지역에서 제시하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최영출, 1999:84-86).

프랑스의 레지옹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장려금은 1982년 지방에서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신규 고용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역 창업 장려금과 지역고용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장려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창업 장려금의 경우 그 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가에게 최고 150,000프랑까지 지급되며 우선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창업일 경우 200,000프랑까지 지급된다. 다음으로 지역 고용 장려금의 경우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추가적인 30개의 일자리에 대해 산악 및 농촌 지역에서는 40,000프랑을 지원하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10,000프랑을, 두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0프랑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는 달리 지역자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의 성격상 지역의 성격이나 업종별로 지원기업의 선정 기준이나 액수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독일의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 보조금 제도는 1969년 이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 재원은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기금의 운용은 전적으로 주정부가 주도하여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액수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내 산업체 가운데 제조업, 관광업 등 지역의 주력 사업체 가운데 결정된다. 보조금은 기업 창설 확장 등의 경우 공여되는데, 기업 확장의 경우에는 기존 고용원 수의 15% 혹은 50인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원규모는 각종 조건에 따라 다른데 창업이나 확장비용의 최고 25%까지 지원한다(최승업 · 김주원 · 박상규, 1999:48).

나. 일본

일본의 도도부현에서는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기반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도도부현이 기업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는 주요 지방세목은 도도부현민세, 법인사업세, 부동산소득세 등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해 공익상의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 조례변경을 통해 지방세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조례를 통한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에서 보충해 준다.

일본 도도부현에서 관리하는 기업유치관계 대부금이란 도도부현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깊은 지방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기업에 저리로 대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때 기업에 대한 저리 대부가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의 하에 기금의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부 금리는 연리 3%에서 7%까지 다양한데, 특정지역(과소지역, 발전용지 시설주변 지역 등)을 제외하면 6%정도가 표준적이다. 상황변수는 10년, 거치기간은 2년이 통례인데 상황년수를 7~8년,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표-9〉 오사카부의 첨단산업특인보조금 대상(2005년)

투자고정자본액(토지취득비 제외)	오사카부 내 상용고용자수
300억엔 이상 400억 엔 미만	30인 이상(60인 이상)
400억엔 이상 500억 엔 미만	40인 이상(80인 이상)
500억엔 이상 600억 엔 미만	50인 이상(100인 이상)
600억엔 이상	60인 이상(120인 이상)

주: 괄호안은 IT, 바이오, 나노테크 이외의 첨단산업일 경우

자료 : 금성근(2006: 59) 재인용

다. 미국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기업에 융자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줌으로써 자치단체 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를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의 유형은 산업개발채(Industrial development bonds)이다. 산업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조세 및 주정부의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산업개발채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채권수익률이 낮더라도 채권을 구매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자금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

라. 중국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는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경제정책 기조 및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다소의 기복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 및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조치로 세계 각국의 대 중국 투자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로서 서부지역의 외자유치 우대정책¹⁷⁾은, ① 해외우대 차관 중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도 확대할 전망이며, ② 중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국산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세 조치, ③ 유통업 및 보험업 등 진출 금지업종에 대해 점차 진출을 확대시키고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④ 중서부 지역 내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예정, ⑤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수 우대정책의 만기 후 3년 동안 15%의 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추가하며 수출기업으로서 수출비율 70% 이상 기업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를 감면, ⑥ 이 밖에 중국의 WTO 가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가에 따라 금융,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수정책으로는,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低 세수정책을 실시하고 국가 투자 장려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국적 개인(홍콩, 마카오, 대만기업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세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통세(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 토지증치세, 자원세, 부동산세 등이 있다. 특히, 외자장려 정책으로 기술개발관련 세제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수입생산설비의 면세범위가 확대, 둘째, 국산설비의 구입에 대한 세제우대책이 신설, 셋째, 기술료에 관한 영업세 철폐,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도 면제, 넷째, 수출증치세 관련, 舊기업(1994.1.1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도 신기업의 대우, 다섯째, 수입 설비 시 수출입상품검사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독자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으며, 여섯째, 토지사용권을 불하방식에 따라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일곱째, 기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건부의 융자제공과 주식상장 허가 등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이다(中國情報핸드북, 2000년).

17) 참고: 2000년 6월 16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을 발표하여 목록 중의 225항 산업은 면세 등 우대정책을 부여한다고 규정

2. 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의 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자금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한데 그 지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부지 매입비, 둘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비, 셋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도로 용수시설 등 인프라 설치비용, 넷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교육시설 주택 등의 시설 설치비용 등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이 지원되고, 또한 그 지원기준 및 재원을 보면 우선 지원기준은 지자체와 국가가 투자유치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를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10〉 매칭사업(지자체 50:국가 50)의 지원대상 및 지원부서

지원 대상 사업	지원예산 과목
○ 지자체의 용지매입비 저리융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매입비 지원 ○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차액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개발비 ○ 외국인투자지역 도로 용수 전기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폐수배출(대기오염)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 교육, 주택시설 설치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 ○ 행정자치부 예산(이차 보전용) ○ 산업자원부 예산 ○ 건설교통부 예산 ○ 건설교통부 예산 ○ 환경부 예산 ○ 관련부처 예산 ○ 노동부 예산(고용보험기금 등)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지자체 재정자금 지원기준 마련 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원기준의 투명성과 탄력성이다. 이것은 지자체가 외국투자자와 투자인센티

브 협상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며, 투자가별로 구체적 투자유치 협상 시 탄력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는 적정 지원 수준의 불명확성 및 과다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대비 수도권 간 지원의 차별 부분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재정자립도와 개발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를 구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더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별 유치노력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여부이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2). 투자인센티브 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지역의 재정적 지원정책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세제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외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 현금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다. 이 또한 매우 미비한 수준이어서 현재 FDI 금액의 5~15%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금지원은 그 지원대상이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 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부품 소재업이거나, 5백만불 이상의 R&D센터(상시 연구원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산업입지 지원 또한 수출자유지역이나 외국인전용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투자유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 인하 및 임대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과 각 산업단지별로 일률적인 법인세,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결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서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세제감면정책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제도 수립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감면대상, 지방세목의 자율적인 선정은 여전히 어려워 유연성 있는 외국인투자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비세를 지원하고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한 지원세목의 자율성 부여나 지원 수준의 자율성 부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는 용지매입비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타 지역과 차별적 인센티브가 될 수 없는 것이다(금성근, 2006: 50; 이우배, 2002: 133; 최준욱, 2002: 71).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그 이후 전국적으로 인센티브가 일반화되면서 현재는 오히려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내의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업종에서 제외되고 또한 별도의 조세감면 지원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투자규모, 수출액비율, 고용창출효과, 전후방산업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조세감면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적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고려가 필요하다(오수균, 2003: 342).

일곱째, 감면대상에 대한 다양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삼주(2000: 59)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은 감면 대상 세목이 취득·등록세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의 이전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일회성 지원정책이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준비금,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경우도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중소 외국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부재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는 업체 수 및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체인 경우가 90% 정도

이나 지원되는 제도는 대부분이 고도기술기반사업부분의 세제지원 혜택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우배, 2002:134). 이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전술하였지만 재정지원정책과 금융정책이 연계되어 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대부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외국기업 유치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회성 재정 지원이 많아 실제 지역 입주 후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이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V.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방향

지금까지 기업투자유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특징, 기업투자의 입지선택요인,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유치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파악하기로 한다.

1. 정책방향개선 부문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는 지역의 비교우위가 가능한 기업지원 분야, 산업여건을 고려한 경쟁력확보 가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유치는 지역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기업유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외국인 기업투자

18) ○○도 투자유치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임.

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 1)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77.3%가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지역에 8.1%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확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에 외국인투자의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2) 2007년부터 인천,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의 투자유치여건이 기존 대기업의 존재,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으로 비교우위가 있거나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지역별 여건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토대로 경쟁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별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이를 보면 전체산업 중에서 도·소매업이 58.1%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9.9%, 전기전자가 5.4%, 음식·숙박업이 3.9%, 금융보험업이 3.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별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외국인 기업투자유치는 효과가 미미했거나, 지역별 특성화된 유치전략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기업 투자유치 전략은 지역별 산업여건 및 연관 효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 산업별·연도별 외국인 투자규모의 추이를 보면 산업별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금융보험업이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12.5%, 도·소매업 10.3%, 문화오락 7.2%, 화공 5.6%, 부동산 임대 5.6%, 비즈니스서비스 5.5%, 운송용 기계 4.8%, 음식·숙박 4.2% 등의 순으로 투자기업의

순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투자유치에 있어서 투자금액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면 건당 투자규모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지역별 1인당 GRDP 및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중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서울, 충남, 전남이 모두 최근 3년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역의 총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기업유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6) 외국인투자의 입지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국내기업의 집적,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수, 외국인 전용단지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 중에서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와 고등교육 이수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공단분양가 이외에 현행 투자유치지원제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연관 기업의 클러스터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7)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간 역할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 인세인하, 임금수준의 경쟁력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국내지역 간 입지선택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단비용, 교육수준, 전용단지 조성, 부품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2. 재정지원제도 개선방향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전술한 사항들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각종 조세지원 등은 지방세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주고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의 매입비 지원이나, 지자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자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또한 그 지원기준 및 재원을 보면 우선 지원기준은 지자체와 국가가 투자유치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지자체 재정자금 지원기준 마련 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원기준의 투명성과 탄력성인데, 정보의 비공개는 적정 지원 수준의 불명확성 및 과다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서 투자인센티브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정지원정책과 금융정책이 연계되어 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2) 현금지원제도에 의한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이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부품소재업이거나, 5백만불 이상의 R&D센터(상시 연구원 20인 이상)에 대한 기준을 500만불이상과 상시 연구원 10명 이상 등과 같이 조건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어느 지자체나 천편일률적인 지원이어서 차별성이 없으므로 산업여건 및 지역의

기업지원 비교가능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감면대상, 지방세목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한 지원세목의 자율성 부여나 지원 수준의 자율성 부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4) 일반 제조업의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업종에서 제외되고 또한 별도의 조세감면지원제도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탄력적이며 유연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조세감면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적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5) 외국기업 유치 후의 사후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재정적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이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3. 기타 관련 개선사항

- 1) 지역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위계적 종속관계에서 분권적 협조관계로 전환시켜 다각적인 정책단위들과 수평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료형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에서 벗어나 기업형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데 선결되는 과제는 우선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혁신적 리더십이며 이는 단순히 유능하고 강한 지도자를 뛰어 넘어서 개혁과제에 밀착된 리더십체계의 활용이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핵심적 요소이다.
- 2) 민관합작의 조직 설립과 창업법인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신규 창업법인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3)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조합, 금고 및 각종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조합 등을 이용해 성장 잠재력이 큰 외부 투자유치기업이나 지역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 때문에 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의 기업과 각종 단체들이 주도해 설립한 조합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4) 지역 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유치하거나,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과 연계한 투자기업의 선별적인 유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
- 5)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여건을 조성하여, 서류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역발전 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사업지원서비스, 교육 및 주택, 편의시설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 6)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산업 비중이 큰 경제구조에서는 우수인력의 조달과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이 기업유치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여 소규모이어서, 연구거점 프로그램이 고급화되기 어렵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대학에만 한정된 면이 있으므로 고급인력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의 학사이상 기술·산업인력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학사인력은 공급초과를 보이는 분야들도 많이 있으나, 석사·박사인력은 전 분야에서 부족하여 학사이상 인력은 2006-2010 연평균에 있어 전체적으로 1만 8천명 이상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 7) 기업이 요망하는 고급인력은 해당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의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인근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계약학과 제도를 마련하여, 학과에서는 기업의 연수 등을 통한 업무체험을 학점화하고, 기업은 미래에 요망되는 프로그램 등을 학과에 요청하는 형태 혹은 실무자를 파견하여 특강을 하는 방식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8) 고급인력들이 창업을 하고, 그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지원이 필

요하다. 서울과 경기도는 2004년 기준 전국 벤처기업분포의 33.6%와 2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외국기업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고급인력의 공급이 용이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1차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의 장점들이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9) 외국인 기업투자유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이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1.7%(355.6조원), 고용의 46.9%(134만명),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전체 부품소재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서 고용창출효과도 높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중 협력업체가 있는 기업은 66.7%이며, 수도권지역 업체들의 협력비율이 높고(77.3%) 지방소재 업체들이 낮은 편(62.0%)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원자재의 54.7%, 부자재의 15.6%, 기계장비의 29.7%를 구입하며, 지역 내 구매비율은 15.2%, 국내 타 시·도 51.2%, 해외구매 비율은 33.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지역 내 구매비율 및 해외의 실증연구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10)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기술혁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혁신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며, 산·학·연 주체 간 활발한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 부품소재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지역산업과 연관된 부품소재기업들의 입지를 지원해 주며,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단지마련, 분양가 혜택, 임대료 지원 뿐 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 등을 통한 우수 인력 공급, R&D에 의한 원천기술의 공급 등을 지원해 주며, 지역의 R&D인력과 산업인력을 각각 체계적으로 육성 필요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다음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총생산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외국인투자실적이 많은 지역이 지역총생산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외국인 투자는 기업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경제적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이를 보면 전체산업 중에서 도,소매업이 58.1%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9.9%, 전기전자가 5.4%, 음식, 숙박업이 3.9%, 금융보험업이 3.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업의 집적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선 동일 산업의 국내 기업의 집적도,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수, 공단 분양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 및 입지선택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고려해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인세인하, 임금수준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지역 간 입지선택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단비용, 교육수준, 전용단지 조성, 부품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투자유치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적절한 지원책이 미비하여 실질적 투자성과를 이루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지원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지자체별 유치노력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재정적 지원정책의 문제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제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투자기업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 현금지원제도는 지원조건이 외국투자

기업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산업입지 지원 또한 수출자유지역이나 외국인 전용단지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유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세제감면정책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제도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법률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는 용지매입비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타 지역과 차별적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률적인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감면대상에 대한 다양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여덟째, 중소 외국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홉째로는 외국기업 유치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재정적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이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정책결과이다. 특정 기업이 특정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총체적 정책결정의 결과이다. 기업의 투자결정은 그 기업의 과거 실적과 현재의 기업용량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기업 내 모든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도출되어지는 결정이다. 많은 경우 기업이 사활을 걸고 혹은 미래를 걸고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는 의사결정이어서 재정문제 이상의 것이 내포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전략에는 대상 기업들의 이러한 절심함이 반영되어야 하며, 유치대상 기업들의 미래를 밝은 모습으로 보여 줄 정도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유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전·후방연계 산업의 클러스터 및 1차 소비지 구축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특정 부류의 기업들에게 어떤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강력한 인상을 심어 줄 만한 집중된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지역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시장 주도적이고 경쟁을 통한 고효율 확보의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21세기 경제구조에서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미 많은 국가의 지역들이 그 결실을 보고 있다. 과거 집권적-수직적이며,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을 벗어나 분권적-수평적이며, 지역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적 특화 산업정책을 일으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겉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협력체를 회의장으로 이끌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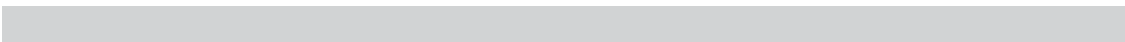
- 곽태원, 1985,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 금성근, 2006, “부산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4.
- 김승민, 2004, “유럽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주요 특징과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7집, 한국프랑스학회, 435-458.
- 김종웅·이상엽, 2005, “대구지역 안경테산업의 클러스터 특성 및 효과분석”, 경제연구, 제23권 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179-199.
- 김종웅·이상엽, 2007, “안경테산업 클러스터 비교연구”, 경제연구, 제25권 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153-167.
- 김일태·김봉진, 2008, “광역경제권과 호남권 지역발전 전략”, 한국경제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제통상학회, 217-234.
- 김태환·김광익·류승한·변필성·황승미, 2004,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 소영일·고종문, 20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방안”, 국제교육정보연구,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Vol.1, 145-170(26쪽)
- 오수균, 2003,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 Vol.7, No.3, 323-346(24쪽)
- 원윤희, 1996,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 윤건영, 1988, 「자본소득세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제2집, pp. 261-288.
- 윤건영, 김종웅, 1997, 「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 『공공경제』, 제2권, 1997, pp. 162-199.
- 윤건영, 김종웅, 1998, 「우리나라의 산업별, 자산별 자본비용과 투자」, 『한국경상논총』, 제14권,

- 1998.
- 유승훈, 1997,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 2권 제 1호, 24-38.
- 이광국 (2006), “부산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와 지정가능성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5-07.
- 이기동 · 황석준 · 이민환, 2008, “Agglomeration Economics and Location Choice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Korea”, 학술대회발표논문,?
- 이삼주, 2000,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지방공단에 대한 기업유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Vol.5, No.1, 49-60
- 이우배, 2002, “지역발전과 외국인기업유치”,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집, 한국정책학회, 129-139(11쪽)
- 장재홍 · 정준호 · 정종석 · 허문구 · 서정해, 2006, “혁신활동의 지역간 비교분석”, 국토연구원.
- 조계근 · 황규선, 2004, “기업유치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을 사례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4-1.
- 최외출, 1995, “자치단체의 지역기업유치와 지원 및 관리정책의 체계화”,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 Vol.7, No.1, 89-118
- 최영출, 1999, “영국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외국기업유치전략”,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제3권 제2호, pp. 95
- 최준욱, 2002,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조세정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Vol.70, 67-80(14쪽).
- 최창규, 2005,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발표논문, 한국국제경제학회.
- 하종욱 · 최귀련,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태적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 8권 제 1호, 25-51.
- 최승엽 · 김주원 · 박상규, 1997, “민자(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UN, 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New York.
- NIAO, 1998, Inward Investment, North Ireland Audit Office, UK
- UNCTAD(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s, New York, 2003.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노홍석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노홍석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기업이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업무이다.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이 10.5%로 전국 평균(4.1%)보다 3배정도 높을 정도로 고질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하다. 지난해 말 전북의 실업인구 2만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 4000명의 청년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북을 떠났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66년 252만명(전국의 8.8%)을 정점으로 매년 평균 2만 4,000명씩 감소하여 현재는 전국 3.8%인 186만명 수준으로 180만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의 2008년 재정규모는 총 3조2,283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가 2조 6,9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368억원이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 역시 15.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유치의 방향과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실제 기업유치 과정에서 겪는 문제사항과 제도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여 국가나 전라북도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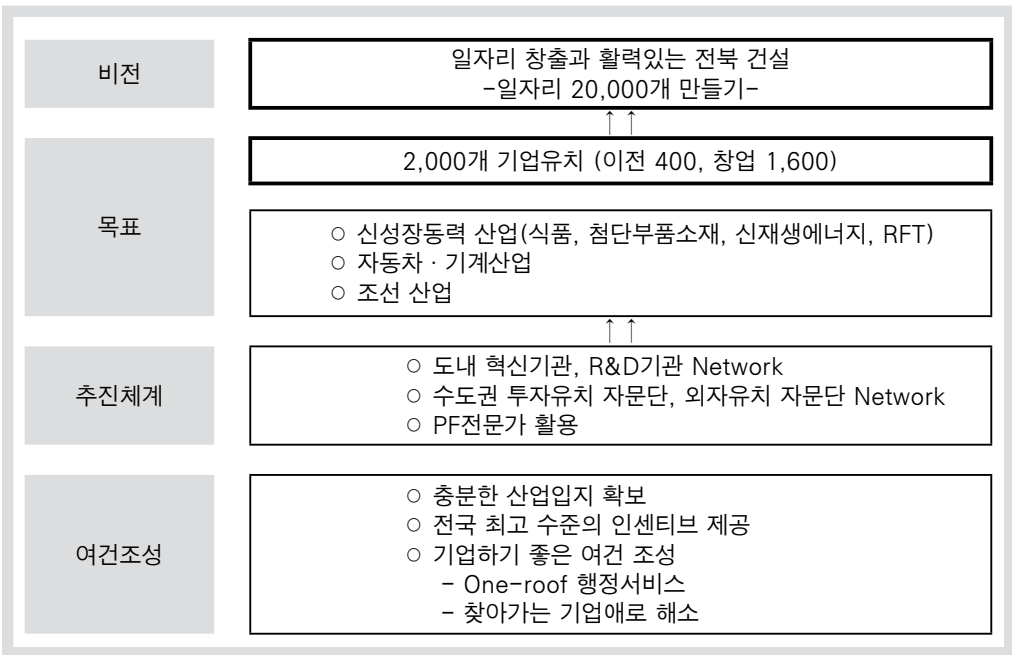
2. 연구의 범위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해당하는 401km²의 새만금지역과 인근의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에 투자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2008년에만 30여개의 기업 또는 투자그룹이 전라북도를 찾아 이 지역이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와 전라북도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투자유치는 개발방식과 개발주체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 단시일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를 전라북도로 하되 공장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유치에 한정하였다.

II. 기업유치 추진 방향

전라북도는 민선 4기를 맞아 도정지표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2,000개 (창업기업1,600개, 이전기업400개)의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1〕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 방향



1.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이를 위해 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기업당 기존 50억원의 한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바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에 로해소 전담팀을 조직해 실시간 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직접 해결하거나 접수하여 그 결과를 전달해 주고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업의 산업 활동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3~4개 내외의 농공단지와 1~2개 내외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있다.

2. 추진체계 구축

기업유치활동은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 등 국경과 경계를 넘어 각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정보싸움이다.

전라북도는 정보전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인들과 금융전문가, 연구소, 연구기관, 투자유치 유관기관, 기업의 조달책임자 등 기업투자 정보에 가장 접근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과의 모임도 상시화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금융회사 PF전문가를 2인을 영입하여 새만금지역과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유치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및 도간부와 미팅을 통해 기업 활동과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여 증설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3. 기업유치방향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는 주로 3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현대상용차, 타타대우, GM대우, 동양물산, LS전선, 캐스코 등 이미 도내에 뿌리내리고 있고 전북산업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동종 업종의 기업과 협력업체를 목표로 하는 기업유치 활동 중이며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 등 핵심기업들을 유치한바 있다.

또 한 가지 도가 주목하는 산업은 고용 유발계수가 높고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을 수 있으며, 전라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3~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편 결과 금년 5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였고 추가적으로 2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분야는 향후 100년 대계를 이끌 신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도는 세계의 공장 중국을 타깃으로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식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준비 중이다. FTA에 대비한 농업과 식품산업육성, 전북만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산업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기지 조성 등을 통해 낙후된 전북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역점 시책으로 전라북도가 강점이 있는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전통적인 농도로써 장류, 치즈, 복분자, 홍삼 등 다양한 농식품 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국 최고의 식품R&D 기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역점 시책은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사선융합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서남권인 전북에 조성해 대 중국을 겨냥하고 특히 서남권 부품·소재 공급기지는 자동차와 농기계 부품, 탄소소재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육성중인 사업으로 부안에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새만금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태양광과 풍력 부품, 소재산업을 특화해 육성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 이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연계해 풍력발전종합단지를 조성해 풍력발전기자재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사선융합기술 연구기반이 집적된 곳이다. 규모는

작으나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RFT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원천기술 산업화의 국가적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향후 100년 대계를 이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유치와 집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Ⅲ. 기업유치 성과

1. 전북지역 기업유치 실적

(1) 연도별 기업유치 추이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실적은 2004년 419개, 2005년 407개, 2006년 504개, 2007년 618개 등 총 1,948개사를 유치하여 매년 평균 500개 이상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내 창업의 경우 매년 400개 내외로 큰 변동이 없으나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이전기업의 수는 2004년 22개에서 2006년에는 101개로 처음으로 100개를 돌파한 이래 2007년 198개 기업으로 기업수가 4년 만에 각각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표-1〉 최근 전북지역 기업유치 실적

구 분	유치기업 수		투 자 금 액	
	창업/증설	도내이전	창업/증설	도내이전
합 계	1,948개		78,523억원	
	1,556개	392개	39,118억원	39,405억원
2004년	419개		5,589억원	
	397개	22개	4,765억원	824억원
2005년	407개		19,531억원	
	336개	71개	3,435억원	10,096억원
2006년	504개		19,138억원	
	403개	101개	9,634억원	9,504억원
2007년	618개		40,265억원	
	420개	198개	21,284억원	18,981억원

투자 금액 면에서는 2004년 4,765억원에서 2007년에는 40,265억원을 유치하여 4년간 총 78,523 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들어 기업유치 실적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시군별 기업유치 실적

유치업체의 주요 이전지역은 대부분이 산업임지가 밀집된 전주, 군산, 익산, 완주지역이며, 주요 이전업종은 기계장비업, 자동차부품, 화학 및 정밀화학 등이다.

〈표-2〉 시군별 기업유치 현황 및 추이

시·군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전기업)
합 계	364	407	440	618(198)
전 주	55	46	64	79(19)
군 산	63	86	127	251(148)
익 산	76	40	94	89(6)
정 읍	37	51	53	30(3)
남 원	27	45	26	29(2)
김 제	53	27	53	48
완 주	35	44	48	47(21)
진 안	8	8	4	7
무 주	6	5	5	2
장 수	9	9	5	4
임 실	14	12	8	7
순 창	10	9	5	7
고 창	13	13	6	4(2)
부 안	13	12	6	14

기업유치 실적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는 2004년 55개에서 2007년 79개로, 익산시는 2004년 76개에서 2007년 89개로, 군산시는 2004년 63개에서 2007년 251개로 꾸준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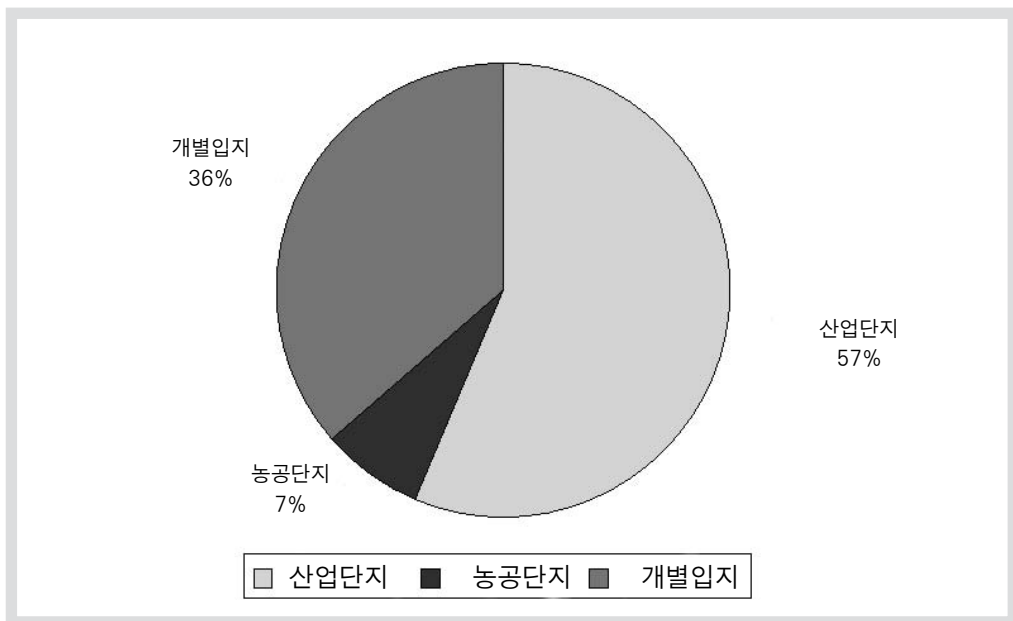
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기업의 수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총 198개 이전 기업 중 군산지역이 14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주 19개, 완주 2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의 기업유치가 2007년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임대단지 지정(20만평), 산업단지 소 필지화 사업 추진,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전문기업 집단이전, 자동차·기계업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입주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입지별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57%로 가장 많고, 농공단지 7%, 개별입지 36%로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업·농공단지(64%)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식품, 금속가공, 화학 등의 업체는 토지매입가격이 저렴한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단지별 기업입주 선호경향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 된 이유는 입주에 있어 대부분이 도내 전략산업인 기계 및 자동차, 중장비 부품업체들로서 GM대우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의 도내 투자 계획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치기업 업종별 현황

타지에서 이전한 기업들은 주로 타타대우, 현대상용차, GM대우 등 전라북도에 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자동차관련 부품업체와 LS전선, 동양물산,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장비업종, 현대중공업을 축으로 하는 조선업종, 동양제철화학,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라북도가 새롭게 육성하고자하는 산업분야와 일치한다.

〈표-3〉 이전기업 업종별 현황

년도계	합 계	기계 장비	금 속	자동차 부품	정밀 화학	조 선	전기전자	대체 에너지	기 타
합 계	413	133	50	86	41	19	23	12	49
'05년	71	20	6	18	6		2	3	16
'06년	101	37	5	29	14		8		8
'07년	198	62	35	24	21	15	13	7	21
'08.1~ 5.	43	14	4	15		4		2	4

(4) 핵심기업유치

민선 4기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규모 100억원 또는 고용 50명이상의 핵심기업 유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하고 있다

〈표-4〉 핵심기업(투자 100억원, 고용 50명 이상) 유치실적

년도별	합 계	2005	2006년	2007년	2008. 5
업체수	91	18	26	42	5
투자액(억원)	58,569	7,846	7,149	26,233	17,341
고용인원	31,733	6,031	4,568	12,116	9,018

※ 주요기업: 현대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다논

2005년 18개에 그쳤던 핵심기업유치 수가 2006년 26개, 2007년 42개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규모 또한 2005년 7,846억원에서 2007년 26,233억원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기업유치 급증 요인

2004년 22개에 불과하던 이전기업의 수가 2007년 198개로 급증하고 투자규모와 고용규모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된 요인은 ①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부여 ②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③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 ④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열정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위해 최고 2억원에 그쳤던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2005년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고, 상시고용 30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한도를 10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한 대로 실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실제 기업유치보조금 한도를 50억원으로 대폭 증가시킨 2005년도부터 전라북도 기업유치 숫자가 급증하였다.

〈표-5〉 전라북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합 계				수도권				비수도권			
	업체 수	합 계	국 비	도 비	업체 수	합 계	국 비	도비	업체 수	합 계	도 비	
합 계	51	31,022	12,855	18,167	11	19,568	12,855	6,713	40	11,454	11,454	
'02년	3	350		350					3	350	350	
'03년	5	753		753					5	753	753	
'04년	5	339		339					5	339	339	
'05년	8	11,918	11,226	692	4	11,226	11,226		4	692	692	
'06년	16	10,815	1,315	9,500	5	7,835	1,315	6,520	11	2,980	2,980	
'07년	14	6,847	314	6,533	2	507	314	193	12	6,340	6,340	

(2)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1990~2006년까지 17년간의 매립작업 끝에 조성된 15,921천㎡의 광활한 군장국가산단이 3.3㎡당 35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기 시작 한 것도 전라북도기업유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3.3㎡당 80~100만원을 호가하는 수도권 등에 비하면 1/3가격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군장국가산단은 부지가 330천㎡ 내외의 광필지로 구성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적합하여 현대중공업처럼 2,000천㎡을 상회하는 매머드급 투자유치도 가능하였다.

(3)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고,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 중심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표-6〉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지 원 목	입 지 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일부를 지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투 자 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고 용 보조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지 원 방 식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국가지원비율 상향(80%)	
지 원 한 도	-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자료: www.kicox.or.kr

이러한 수도권공장입지제한과 더불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지원제도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수도권 이전기업의 숫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지원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알수 있다.

〈표-7〉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현황

(단위: 업체수)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전 국	28	36	60	80	204
전라북도	-	10	13	27	50

(4) 전라북도 투자유치 열정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등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고 실제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이다. 전라북도는 민선4기 도정목표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로 두고 모든 도정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 도지사로부터 실무담당 공무원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실제 기업유치 과정에서 타지역과 차별화 되고 있고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기업 상위 11개 기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1만 1천 5백명을 고용하고 1조 2천억원을 투자하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건설과 1조 8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초기에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현대중공업유치를 위하여 도둑질만 빼고는 다했다”는 중앙지의 보도나 “누가 현대중공업의 직원이고, 누가 도청공무원인지 모르겠다”는 현대중공업 간부의 말이 없더라도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라인은 기업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1 : 현대중공업 유치]

中央日報

“조선소 유치 위해 도둑질 빼고 다 했다”

세계 4위 '군산 조선소' 공무원이 일등공신 망 구해주고 로비하고 - 60차례 찾아 설득

7일 기공식을 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세계 4위(조립 중량·매출 기준) 규모로 지어진다. 중형 자동차 550대를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콜리엇 크레인(1600t), 축구장 12개가 들어설 수 있는 도크(물에 배를 띄우는 시설)도 갖춰진다. 이 초대형 조선소 유치를 일등공신은 전북도청 투자유치팀과 군산시 투자지원팀 공무원들의 열정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신이었다. 김양원 전북도 투자유치국장은 “현대중공업을 끌어 오기 위해 기업 애로 해결사 겸 부동산중개인, 로비스트, 때로는 거간꾼 역할까지 했다. 도둑질 빼고는 다

전북도·군산시 파격행진

-항만부지를 공업용지로 전환 위해 로비
-조선소 부지 마련 위해 중개인 역할
-공장 인허가 기간 1년6개월→15일로 단축
-이전 지원금 150억→200억원으로 확대

하겠다는 각오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이 현대중공업 유치 작전에 나선 것은 지난해 초. “울산 본사 부지가 포화 상태여서 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장 터를 찾는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곧바로 전담 팀을 꾸려 부지 탐색과 함께 “군산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땅값도 다른 곳보다 30~50% 싸다”고 홍보했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60여 차례나 울산 본사를 직접 찾아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에 현대중공업도 군산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항만 부지(18만2000㎡)’라는 걸림돌에 부딪혔다. 전북도는 “매년 2만~3만 명씩 줄어드는 지역경제가 화생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당시 해양수산부에 “항만 부지에서 제척(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의 노홍석 과장, 신현택 계장 등은 “해양부에 아예 사무실을 차리라”는 편지까지 붙이며 거의 매일 서울로 올라가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해양부는 2개월 만에 “전례가 없다”면서도 제척을 해 줬다. 보통

1년6개월씩 걸리던 공장 인·허가 등 행정 절차도 보통 만에 끝내 버렸다. 이들의 열정에 감동한 현대중공업은 당초 8000억원을 들여 선박블록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4000억원을 더 투자해 아예 조선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만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근비만 일 년에 5000여억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3만5000여 명의 인구가 군산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세금 감면 등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150억원이었는데 군산조선소의 경우 200억원으로 늘리는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군산·정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에 급증하기 시작한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지역 내의 고용, 근로자 임금, GRDP, 지역내 소비, 지방세수, 재정자립도, 수출액 등 도내의 각종 지역경제 지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관련 산업들의 집적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의 종류 또한 기존 자동차산업 중심에서 조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다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

(1) 지역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인 이상으로 지역경제변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기업들이 본격적인 근로자 채용과 생산활동에 들어서는 2009~2011년을 기점으로 지역경제 변수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조 2천억원이 투입되어 단일도크로는 세계최대의 건조시설(700m×115m×18m)과 세계 최대의 콜리엇 크레인(1,600톤)을 보유하고 1만 1천 5백명을 고용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이미 1,150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고 조선소 또한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현재 VLCC 9척과 18만톤급 벌크선 12척을 수주하였고 많은 회

사들과 추가수주를 위한 협의 중에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의 고용규모는 도내 전체 42개 농공단지에 가동중인 588개 업체의 전체고용인원 1만 1천명보다 많은 숫자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은 연간 5,000억원 내외로 지역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된다.

동양제철화학, 넥솔론, 상하 또한 매분기 100여명 내외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알티솔라, 쏘라월드코리아, 다논 등 대규모 기업들 또한 인력 채용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균 1,500만원 내외이던 초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증가추세에 있고 2,500~3,000만원을 상회하는 기업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매년 50~60억\$ 규모의 지역수출액 또한 현대중공업(30억\$), 동양제철화학(20억\$), 두산인프라코어, 넥솔론 등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2~3배 증가된 140억\$을 상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기업들의 투자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지방변화나 재정자립도 변화GRDP 영향 등 지역경제 주요변수들에 미치게 될 영향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표-8〉 민선 4기 주요 유치기업 추진 현황

기 업 명	투자액 (억원)	고용인원 (명)	주생산품	특 징	비 고
현대중공업	12,000	8,400	조선소 조선기자재	조선산업 세계1위, 국내 6위 조선소	건설중
두산인프라코어	1,300	400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장비 국내 1위	건설중
동양제철화학	1,800	2,000	폴리실리콘	국내 유일, 세계6번째상용화성공	건설중
넥 솔 론	4,000	500	잉곳 웨이퍼		건설중
쏘라월드코리아	2,100	300	모듈	태양광산업 세계 3위	'08.7월착공
다 논	7천만유로	400	발효식품	유가공분야 세계 1위	'08.7월착공

(2) 산업 구조 고도화 · 다변화

2006년까지 도내 전체 수출액의 50% 내외가 완성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로 채워질 정도로 전라북도는 농업과 자동차 산업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양광산업을 필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산업, 다논 · 상하 · 성화식품 · 하림 · 동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 · 다변화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이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6번째로 원천기술획득 및 상업화에 성공한 태양광 관련 분야에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 다변화에 신호탄이 되고 있다. 4천억원이 투입될 넥솔론의 잉곳 · 웨이퍼 생산 공장과 2천억원내외가 투입될 쏘라월드코리아의 태양전지 · 모듈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대산이앤씨, 켈리플로나라테크 등이 잉곳 · 웨이퍼 공장을 준비 중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생산-잉곳 · 웨이퍼생산-태양전지 · 모듈로 이어지는 공급자 체인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과 연관 효과 또한 높아 상호간에 수천억원 대의 장기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폴리실리콘방식의 태양광사업과 더불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박막형전지 분야 또한 알티솔라가 1천 4백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 외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전라북도와 접촉중에 있다.

태양광산업과 함께 도내에 집적화 되고 있는 분야가 조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건설에 따라 50개 내외의 협력업체가 도내에 투자 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19개는 이미 군장국가산단이나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중 · 대형 규모의 조선소 투자문의 또한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평균 근로자 10인 내외로 그동안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식품산업 또한 25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치즈공장이 금년 6월 가동하기 시작했고, 세계 유가공분야 1위의 다국적기업 다논이 7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공장건설에 들어가며 성화식품 또한 15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오리고기 가공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기존의 하림, 동우 등과 함께 전라북도에 새로운 산업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기업유치 활성화 방향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많은 투자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 산업용지 부족 문제

지난해까지 매년 급증하던 이전기업수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전라북도를 찾고 있지만 임대부지나, 소필지사업 부지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양 중단중인 부지를 제외하고는 군장국가산단의 분양이 마무리 되어 전라북도에 남아있는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기업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이전기업 수는 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는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기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산업용지가 공급될 시기인 2009년 하반기부터는 다수 이전기업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9〉 연도별 분양계획('08~'12)

구분	계		'08		'09		'10		'11		'12	
	단지	면적(천㎡)	단지	면적	단지	면적	단지	면적	단지	면적	단지	면적
계	28	28,317	5	1,088	8	3,062	8	4,548	4	12,462	3	7,157
농공	15	3,547	5	1,088	4	1,027	6	1,432			-	-
일반	13	24,770		-	4	2,035	2	3,116	4	12,462	3	7,157

2. 산업용지 효율적 관리 문제

전라북도의 유치기업의 증가에 비례하여 투자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도 장기간 투

자가 보류되고 있는 기업이나 경영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폐업 상태인 부지 또한 늘어가고 있다. 국가뿐 아니라 도내의 부족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부지나 휴·폐업 부지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08년 5월 현재 1,144개의 업체가 25,472천㎡의 산업단지(농공단지, 지방산단, 국가산단)에 분양을 받았고 이중 917개 기업이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227개 기업은 미착공 상태이다. 부지 면적으로는 전체 분양면적 25,472천㎡의 13.7%에 해당하는 3,325천㎡이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

〈표-10〉 산업단지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분양 면적	분 양 실 적			미분양면적	가동및착공	미착공
		업체수	면 적	분양율			
총 계	25,472	1,144	24,229	95	1,243	917	227
군장국가산단	8,495	304	7,810	92	685	116	188
자유무역지역	1,081	34	532	49	549	31	3
군산국가산단	5,676	155	5,676	100	0	137	18
지 방 산 단	5,641	63	5,641	100	0	63	
농 공 단 지	4,579	588	4,570	99	9	570	18

미착공 상태인 기업을 보면 입주계약 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185개로 대부분에 해당하지만 미착공 상태로 3년이 넘어간 기업도 14개가 된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단공, 시장·군수 등)과 함께 관련부지 회수에 나선상태이며 1 년이상 미착공 상태인 나머지 28개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방문을 통해 조기착공을 권유하고 있다.

〈표-11〉 3년이상 장기미착공 업체 현황

구 분	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기업체수	227	185	18	10	14
면적(천㎡)	3,325	2,846	197	82	200
(미착공면적율)	(13.7%)	(11.7%)	(0.8%)	(0.4%)	(0.8%)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에 휴·폐업 상태로 남아있는 부지 또한 30개 단지, 76개 업체, 702천㎡에 해당 한다. 이중 24개단지, 59개 업체, 490천㎡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체이며 6개단지, 17개 업체, 212천㎡이 지방산단내 휴·폐업에 해당한다. 농공단지 내 휴·폐업 부지는 업체당 평균 900㎡내외의 소규모 면적이다.

전라북도는 휴·폐업부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08년 2월 휴·폐업 기업의 업종, 면적, 주소, 연락처, 매각여부, 임대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매각이나 임대를 희망하는 기업을 입주 희망 기업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방이전기업을의 국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문제

국가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체 또한 부족한 재원에서 수도권기업유치를 위해 지자체 마다 최고 50억~100억원 까지의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인센티브로 기업들에게 지원된 현금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 되어 세후에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실제 국가나 지자체가 약속한 금액의 70%내외에 불과하다. 국가나 지자체의 말만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또한 국가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액의 60% 내외가 법인세로 환수되어 국가의 재정지원 역할은 극히 미약하다. 지자체입장도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 지역을 위해 재투자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국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재정속에서 빚을 내어 지자체가 법인세를 내고 있는 형국 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한손으로는 보조금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지급한 돈을 빼앗는 형태로도 보여 질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지역이전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들에게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

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례2 : LS전선 법인세 납부]

LS전선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전북 완주군으로 1,37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으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받았음.
LS전선은 150억원의 지원금에서 27.5%에 해당하는 41억 2천만원을 법인세로 분할납부중임.

국가는 3개 지자체에 국비 50억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나 재정지원금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법인세로 환수하고 있음.

V. 요약 및 결론

전라북도가 민선4기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현대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다논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유치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현대중공업(고용 11,500명)과 동양제철화학, 넥솔론, 다논,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두산인프라코어, 대산이앤씨, 성화식품, 동양물산, 미원상사 등 고용 200~3,000명 내외의 대규모 투자가 완료되는 1~2년 후에는 GRDP, 고용, 재정자립도, 수출액 등 도내의 각종 경제지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004년 22개에 불과하던 이전기업의 수가 2007년 198개로 급증하는 등 그동안 전라북도에 기업유치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전라북도 조례를 변경하여 이전기업에 최대 100억원 까지 현금지원을 규정하고 실제 예산집행을 통해 투자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등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제도와 둘째, 향만을 배후로 하고 있어 물류여건이 우수한 군장국가산단 내에 3.3㎡당 35만원 내외의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용지가 있었으며 셋째,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억제와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도둑질 빼고는 다한다”는 마인드와 기존 제도와 관습의 틀을 뛰어 넘어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도지사와 투자유치 부서원들의 열정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와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 투자유치 열정 등으로 그동안 전라북도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08년에는 군장 국가산단의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정책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투자유치의 앞길이 장미빛 만은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내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및 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전담조직 강화 등 기업유치가 가능한 제반여건 마련과 더불어 투자유치 부서의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 인센티브로 기업이 받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이다.

다행히 2009년 하반기부터는 공급가능 한 산업용지가 다시 풍부해지고 전라북도가 장기미착공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휴·폐업업체 부지알선 활동 등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